

2014년도 업무추진계획

여성·청소년·가족이 행복을 찾는 길
여성가족부가 같이 갑니다.

2014. 2. 11.



||||||| **목 차** |||

I.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	1
II. 주요 업무계획	5
1.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	6
2. 여성·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	15
3.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	21
4.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	27

I .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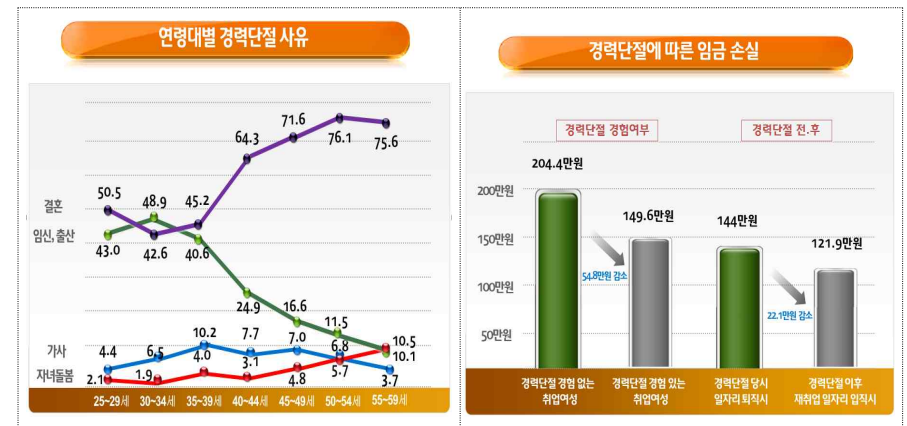


1 정책환경

□ '13년 여성 고용률은 53.9%로 '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,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

* OECD 평균 여성고용률(15~64세, '12 기준) : 57.2%

- 특히, 30대 여성의 출산·육아 등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 여전
 - * 30대의 경력단절 사유는 임신·출산·육아가 52.5%,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적 없는 여성은 3명 중 1명
-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 등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 손실 초래
 - *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차이 월 55만원(경력단절 有 150만원, 無 205만원) ('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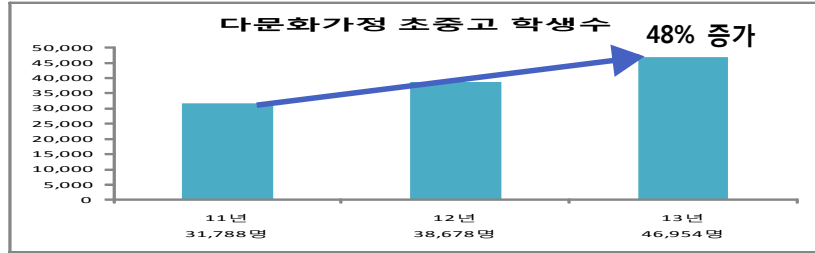


□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

- '13년 세계경제포럼(WEF)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(Gender Gap Index) 136개국 중 111위 차지
-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 여성참여 저조가 주요 원인
 - * 경제참여 및 기회 118위, 정치적 권한 86위

□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지원·보호 기능 시급

-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자녀 급증 추세('11년 31,788명 → '13년 46,954명 48% 증가)



* 출처 : 교육부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

- 한부모가족은 지속 증가 추세이나, 정부지원은 13%에 불과하며 이혼·미혼가정의 자녀 양육비 이행은 부족한 실정
 - * 171만 한부모 가구 중 정부 지원 22만 가구
 - * 자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이혼, 미혼 한부모가 83%

□ 폭력 피해율은 감소하나 적극적인 신고 및 지원 요청은 낮은 상황 ('13년 성폭력·가정폭력 실태조사)

- 3년 전('10년 대비 '13년)에 비해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2.9%에서 1.5%로 감소, 부부폭력 발생률은 53.8%에서 45.5%로 감소
- 부부폭력 피해자 중 98.2%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,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1.1%만 경찰에 직접 도움 요청
- 국민은 성폭력·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가해자 법적 조치 강화,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요구

□ 청소년활동 안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

- 그동안 청소년활동 시 사건·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
- '12년 학업중단은 약 6.8만명, 무엇을 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약 28만 여명으로 추정(전체학령인구 712만명의 약3.9%) (출처:'13년 교육통계)

2 추진방향

I

비전

여성·청소년·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

핵심 과제

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

여성·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

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

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

실천 과제

▶ 여성대표성 제고 및 인재 양성
▶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
▶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강화
▶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
▶ 여성정책 국제 협력 강화

▶ 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
▶ 성폭력·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
▶ 성매매성희롱 방지 및 자활지원 강화
▶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교육·홍보 강화

▶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
▶ 청소년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
▶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치유 지원
▶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

▶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
▶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
▶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 지원

II. 주요 업무계획

1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

1 여성대표성 제고 및 인재 양성

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

-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('14.2월)에 따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('17년까지 40%) 달성 차질 없이 추진
 - *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: ('13)27.7% → ('14)31.6% → ('17)40.9%
 - 여성참여 현황 조사 및 공표, 여성참여율 40% 달성이 곤란한 위원회의 사유를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
 - * 중앙정부 위원회(조사 및 결과공표, 연2회), 지자체 위원회(여성참여 현황 전수조사, 1회)
-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여성 임용 확대 및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('17년까지 15%) 달성 이행 독려
 - * 4급 이상 여성관리자 : ('14)10.9% → ('17)15%
 - 고위공무원 임용후보자 3배수 범위 내 여성 포함 및 4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목표 하위 10% 기관 중점관리
- 군·경찰 여성 관리자 및 여성비율 확대 이행 독려(국방부, 경찰청 협조)
- 공공기관의 기관별·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수립하고, 기관별 여성관리자 현황 공시 등 이행 점검
 - * '14년 경영실적 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등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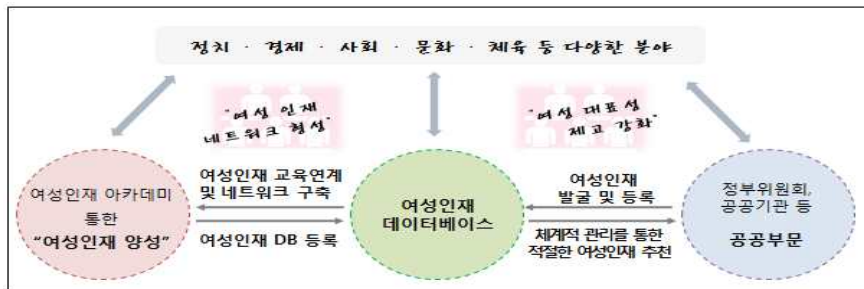
②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

- 교육생별 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수료생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관리 강화
 - 직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및 주말 교육,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
 - * 온라인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

- 교육대상을 기업·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 후보군, 지역인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('14년 7천명 교육)
- 권역별 지역거점 교육기관을 지정·활용하여 전국적인 교육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거주자의 참여 기회 확대
 - * 부산·경남, 광주·전남, 강원, 충청, 전북, 경북 등 6개 지역
- 「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」 사업과 연계하여 고위 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네트워크 역량 종합적 배양
 - 청년 여성부터 관리자급 및 최고경영자를 아우르는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 도모

3 여성인재 양성·발굴·추천의 체계화 및 유기적 연계

-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·확충하는 기반 구축('14년 1.5만명 신규 발굴)
 - 여성인재 정보 수집·관리에 관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(2월)
 - 여성인재 DB 등록 기준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(2월)
 - * 여성인재 DB의 방화벽 등 시스템 보안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
- 여성인재 추천 및 사후관리 효율화로 여성인재풀 활용성 제고



2 경력단절 예방과 일·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

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활성화

-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
 - 일·가정 양립 핵심지표 중심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
 -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, 대기업과의 인증기준 차별화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
 -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·기관평가 시 우대방안 등 검토
-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
 -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속 발굴
 - * 투융자 금리 우대(최고 1~1.5%), 상장기업 가족친화 인증정보 자율공시 등
 - 정부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대
 - * 미래부·산업부·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

2 일·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

-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
 - 국·내외 가족친화경영 성과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
 - 대한상의 회원사(14만) 대상 가족친화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
 - 기업경영층 인식 개선을 위한 CEO 대상 전국순회 특강
- 가족친화 경영대상 시상식(KBS공동), 언론매체 기획보도 등을 통한 가족친화 우수기업 홍보
-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'가족사랑의 날' 캠페인 지속 추진
- 수혜자별·생애주기별 맞춤형 일·가정 양립 정보 제공 앱 개발·보급(상반기)

③ 맞벌이 가정을 위한 빈틈없는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

-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맞벌이 및 취업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 서비스 제공
 -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
 - * 영아종일제 돌봄 연령 확대 : 만 0세(3~12개월) ('13) → 만 1세(3~24개월) ('14)
 - 취업모 우선지원으로 취업부모 자녀의 양육공백 돌봄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

	저소득	일반가정
취업모	1순위	2순위
전업주부	3순위	4순위

-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과 4대 보험료 반영 등 처우 개선
 - * 아이돌보미 수당(시간당) : ('13) 5,000원 → ('14) 5,500원
 - *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반영 : ('14) 4,883백만원
- 활동 인센티브 추가 제공으로 공휴일·심야 및 이용집중 시간대와 수요 밀집지역의 초과수요 해소
 - * 인센티브(수당외) : 심야·주말, 도서벽지 등 1,000원, 장기(2년이상) 근무자 월10만원
- 획일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본형(현행 아이돌보미)외에 종합형(기본형+가사서비스),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화
 - * 1~6월 2차 시범 실시 후 7월 본격 실시
- '방과후 아카데미'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 돌봄서비스 제공 * 방과후 아카데미 : 200개소 / 8,000명(초등 4~6, 중등 1~2)

3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강화

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

-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(10개소)을 통해 경력, 전공,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
 - * 새일센터 이용 대상을 20·30대 경력단절여성, 취약계층, 농촌지역 여성 등으로 다양화
-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기술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훈련 확대
 - 원활한 직무적응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에 '새일역량교육'(5일 이내) 신설
 - * 전문기술 및 현장맞춤형 훈련 ('13) 68개 과정(10%) → ('14) 86개 과정(15%)
 - * 한국세무사회와 연계한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신규 운영
- 새일센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직의사, 취업여부 등을 고려한 경력단절 단계별 온라인 교육·상담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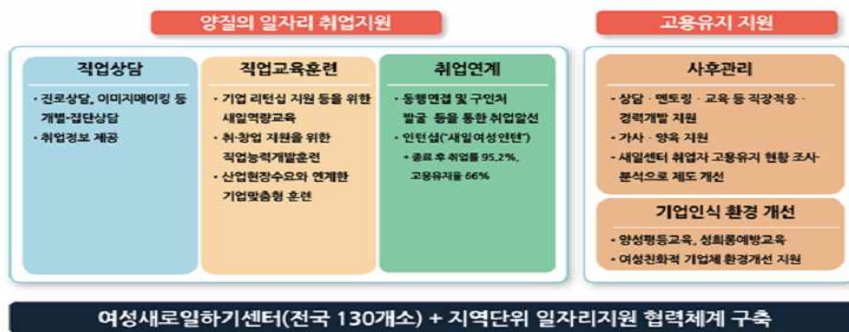
②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확대

- 기업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모범사례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
 - *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, 채용 후 효과, 애로사항 등 업종별(금융, 보건, 유통, 콜센터 업종 등) 특징 분석

-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
 - 참여기업의 직무분석을 거쳐 적합한 경력단절여성 연계 및 교육 지원
- 구인·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강화
 -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, TP) - 새일센터 간 협력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참여(지자체 협조)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

③ 취업 후 고용유지 및 재 경력단절 예방 강화
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
- 취업자에 대한 노무상담, 멘토링실시 및 채용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
 - * 업체당 최대 400만원(지원비율 60%) → 최대 500만원(지원비율 70%)
- 새일센터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성과평가 내실화
 - *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원, 고용보험가입률·고용유지율 등 성과유주로 평가개선 및 우수·부진기관 환류 강화
-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'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'(15~19) 수립



4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

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운영 내실화
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성과목표 지속 미달성 사업을 포함하고, 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연계 강화
 - * 사업 분석평가 시기 : (중앙) 5월 → 3월 (지자체) 10월 → 8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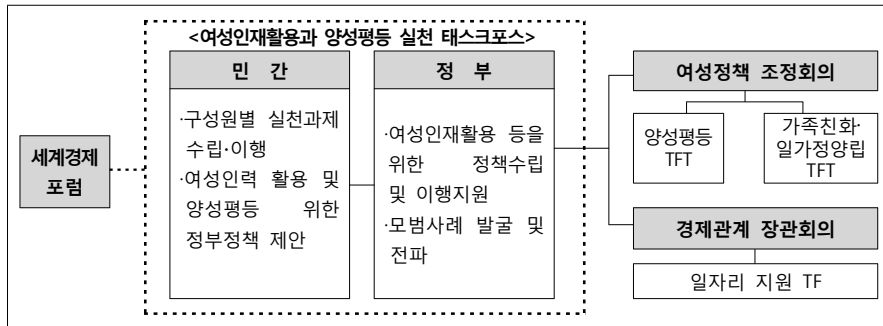
- 기획재정부, 통계청 등 성인지 예산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강화
-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
 - * 일반 국민과 NGO 대상 공모 등을 통해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(~4월),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
 - *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우수사례(시설, 건축물 등)에 우수마크 수여

② 양성평등 제도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

- 중앙-지자체-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
- 양성평등 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방송·보도분야에 대한 양성평등상 시상
-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
-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실시('14년)

③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구성·운영

- 정부, 기업,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(여성인재활용 TF) 구성(상반기, '17년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)
 - * 세계경제포럼과 여성인재 활용 TF 구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('14.1.21, 스위스 다보스)
- 일·가정 양립, 여성고용 확대, 여성대표성 제고 등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, 모범사례 공유·전파
 - * 여성인재활용 TF 구성원별 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포럼, 설문조사 등 실시
- 추진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
-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인재활용 TF 연계 강화
 -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·일가정 양립 TFT 운영 정례화로 부처협업 및 총괄·조정 강화
 - 여성인재활용 TF의 실천과제 이행 상황 등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
 -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성인재활용 TF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



5 여성정책 국제협력 강화

① 국내·외 여성 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WEF, OECD, 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하여 여성 정책 및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
-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여 국내·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분야별 정보 교류('14.8월, 경북 구미)
 - * '여성의 경력단절 예방'을 주요 주제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
-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평화·안보분야 여성 참여 제고
 - * 시민사회단체·전문가가 참여하는 민·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계속

② 개도국 여성역량 및 양성평등 지원

-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이 축적된 한국형 ODA 사업 확대
 - 베트남에 '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'를 추가 구축하여,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
 - * 수원국 요구를 반영한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
 -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우수 정책 사례와 인프라 공유
 - * 캄보디아 인신매매피해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예방 캠페인 전개
- 유엔 등 국제기구의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
 - 유엔여성기구(UN Women) 대상 기여금 공여 및 여성의제 관련 적극 참여

③ 국제회의를 통해 여성정책 국제적 연대·협력

-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(CSW) 참가(3월, 뉴욕 유엔본부)
 - * '새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'를 의제로 토론 및 기조연설
- 제6차 동아시아 각료급 가족포럼 개최(12월, 서울, 한-ASEAN 특별 정상회의 연계)
 - * 동아시아 가족 정책 국가기구와 협력 파트너십 구축

2 여성·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

1 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

① 공공기관에서의 폭력 예방교육 확대

- 가정폭력방지법 개정·시행(1.31.)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확대(초·중·고(학생) → 국가, 지자체, 공공단체 추가)
 - * 의무교육 : 성희롱('99) → 성매매('08) → 성폭력('13.6~) → 가정폭력('14.1)
- 교육대상 및 분야 확대에 따라 통합교육 운영기반 마련
 - 각 의무교육(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예방교육)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·시행
 - * 여성발전기본법 개정('14.2.14. 시행),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개정('14.7.22. 시행)

② 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지원

-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('13년 1,200회 → '14년 2,500회 이상)
 - 민간사업장 종사자,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
 - * 취약계층, 격오지 근무 군인 등을 교육대상으로 발굴하여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
 - * 체계적 교육지원을 위한 중앙·지역(10개) 지원기관 운영
- 아동·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강화
 - 농산어촌 지역 아동·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추진
 - * 청소년성문화센터 : ('13) 50개소 → ('14) 54개소(이동형버스 9개 포함)
 -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과 연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

③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관리 강화

- 교육대상 연령·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개발
 - 아동·청소년 대상 '성인권 교과과정' 개발(교육부·복지부 등 협업)
 - * 유아용, 초등학교 저학년용, 중학교용, 고등학교용 교육프로그램 개발(4종)
 - 노인,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체험형 학습, 예방조치 매뉴얼 등 프로그램 다양화
 - * 기관용 '성폭력 예방조치 매뉴얼(사건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)' 개발
 - * 성인권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 및 유관부처 교육프로그램 발굴·연계
-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전문강사 확충 및 역량 강화
 -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풀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접근성 확대 및 다양한 직군의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 제고
 - * 전문강사 '14.1월 1,400명 → '15.1월 1,600명 → '17(목표) 2,000명
 - 전문강사와 프로그램, 실적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,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여 콘텐츠와 강사의 질 제고

④ 폭력 예방교육 품질관리 강화

-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고위직 참여율, 교육 만족도 등 세분화된 교육실적 제출·공개
 - *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(shp.mogef.go.kr)의 교육실적 입력, 관리방법을 고도화하여, 일반국민도 그 결과를 편리하게 열람,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
- 예방교육 점검 및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통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(7월~)
 - 교육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, 기관 평가 반영 요구,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등 실시
 - *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개정('14.7.22. 시행)

2 성폭력·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

1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편의성 제고

- 한부모, 조손가정 등의 성폭력 피해아동·지적장애인 중 심리 치료를 위해 동행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
- 13세 미만 성폭력피해 아동, 또는 성폭력 피해자 중 돌봄 자녀가 있는 경우, 일정 기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, 외상 피해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 지원
- 피해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 수사기능 지원* 및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** 시범운영(여가부, 경찰청, 대검찰청 협력)
 - * 수사·진술녹화지원부터 심리치료까지 한 곳에서 지원
 - ** 경찰단계 피해자 진술조사 시 검사가 영상으로 협력하여 중복진술조사 최소화
-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 피해자 진술절차를 보조하는 진술 조력인 양성(법무부)·배치(여가부)
- 성폭력사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여성·아동폭력피해중앙 지원단의 법적근거 마련* 및 중앙허브기능** 강화
 - *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
 - ** 주요 사건 전문가 파견을 통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

2 아동·청소년 성보호 강화

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정형 상향 및 양형 개선을 위한 판례 분석
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평가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
 - *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재범률 조사 근거 마련
-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강화
 - * 거주지 주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본인 동의절차를 거쳐, 공인 전자주소(샵 메일)로 보낼 수 있는 방안 추진
- 성범죄자 경력조회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직원 경력조회 업무편의 도모 및 취업제한의 신속한 이행 확보
 - *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(온라인) 구축('14), 운영('15~)

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

-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 및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, 직업훈련비 지원 등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
 - * 가족보호시설(남아동반 가능) 6개소, 주거지원시설 40호, 이주여성보호시설 3개소 확대
-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, 상담원 동행출동 등을 위한 경찰, 1366긴급전화, 상담소, 보호시설 간 연계 강화(경찰청 협조)
 - *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운영, 긴급피난처 확대 및 1366 상담원 증원 등
-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쉼터 등으로 이동시키지 않고, 행위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하기 위한 감호위탁 제도 개선 협의(법무부 협조)
- 「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뜨리기」 교육·홍보 캠페인

3 성매매·성희롱 방지 및 자활 지원 강화

1 성매매·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

- 「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」 회의를 통한 지속적 정책 발굴 및 개선조치 강화
 - * 성매매 알선 여행업자 행정처분 근거 마련(문체부), 성구매사범 재범방지 교육 개선(법무부) 등
- 신·변종 성매매 업소,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분기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한 피해자 구조 및 인권 보호 강화
- 청소년성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및 홍보
 - 현장 구조·상담 강화 및 청소년 성매매 전문 상담 교육 확대
 - * 청소년 사이버도래 상담실 및 위기청소년교육센터(중앙·지역 11개소) 운영
- 인신매매 방지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
 - 캄보디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ODA 사업 지속 추진
 - 국제심포지엄 및 성매매방지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
-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내실화
 - 성희롱 사건 은폐·추가피해 관련자 징계 및 기관평가 반영(7월~)

2 피해자 지원·자활 내실화

-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('13년 88개소→'14년 91개소)
- 취약계층 여성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장 활성화
 - 미용실 등 자체 운영 매장의 정부·공공기관 내 입점 추진
 - 민간기업 노하우 전수를 통한 기술·경쟁력 제고
-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인권교육 및 폭력피해 심리치유 내실화
 - *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지원기관 확대('13년 8개 → '14년 10개)

4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교육·홍보 강화

1 피해자 생활안정 등 지원 확대

- 피해자 노후건강 지원 사업 강화
 - * 간병비 : ('13)133 → ('14)232백만원(74.4%), 치료비 : ('13)160 → ('14)212백만원(32.5%)
- 개별방문을 통한 상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(주거환경 개선, 지역자원 연계) 확대

2 교육·홍보활동 강화로 역사인식 제고

-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 추진
 - * 기념일에 국제심포지엄, 문화제(음악, 연극, 미술전시 등) 개최
- 교육용 교재 개발, 학생 참여를 통한 역사인식 제고 작품공모전 지원, 다큐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교육·국내외 홍보
- 민간단체 추모관, 전시관 건립 지원 및 e-역사관 개편 추진
 - * '나눔의 집' 추모관 건립, 대구지역 '일본군 위안부 역사관' 건립 등
 - * e-역사관 영어, 일본어 사이트 정보 현행화 지속 실시

3 기록사료 수집 및 보존

- 관련 자료 조사 및 체계적 분류사업 확대 추진(미국, 중국 등)
- 민간 NGO 소장자료의 국가기록물 추가 지정
- 기록사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착수(~'17)
 - * 민관 T/F운영(외교부, 국가기록원 등 관계부처, 역사학자, 법률가, 민간단체, 관련 콘텐츠전문가 등 21명)

4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

- 앙굴렘에서 전시된 작품 순회전시
 - * 앙굴렘 국제만화축제(한국만화기획전 '지지 않는 꽃' 전시, '14.1.30~2.2) 후원
-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·해외 인권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,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추진

3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

1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

①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

-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(www.youth.go.kr) 고도화 추진
 -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
 - * 수련활동 정보 내용 : 프로그램유형, 인증여부, 위탁여부, 보험가입 등
 - 스마트폰 앱 개발·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
 - * 지역별·운영기관별·종류별 프로그램 찾기, 주변 활동프로그램 검색 기능 등 개발
- 숙박형 외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확대 및 대규모·고위험 사전인증 의무화
 - *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('14.1 공포), 하위법령 마련·시행('14.7.)
-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안전점검·평가 실시
 - * 안전점검·종합평가('14.1~6월) : 수련관, 문화의 집 등 342개 시설
 - * 신고·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이행실태 점검('14.3~, 지자체 합동)

②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

- 자연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제공
 - * 고흥(우주)·김제(농생명)·영덕(해양환경) 등 국립시설 및 공공기관 특화프로그램 활용

- 자유학기제,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코디네이팅 역할 강화
 - * 17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, 공공수련시설 활용
-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소외청소년 체험활동 지원
 -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내실화
 - * 한·중 인문유대강화 추진 : ('14 신규) 40명 규모
 - * 다문화 등 소외계층 교류참여 확대 : ('13) 2회 → ('14) 6회
 - 국제성취포상제 금강총회 개최('14.10)를 통한 자기 주도적 체험 활동 활성화
 - * 자기도전 및 국제성취포상제 : ('13) 4,686명 → ('14) 5,350명
 - 소외청소년 문화·예술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(문화부 협조)
 - * ('13) 46개소 834명 → ('14) 70개소 950명

③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

- 읍·면·동에 설치하는 '청소년문화의 집'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
 - * ('13) 228개소 → ('14) 241개소
- 시군구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에서 청소년 정책결정에 참여 여건 조성
 - * 청소년 참여위원회 : ('13) 171개 → ('14) 177개 → ('17) 모든 시군구
 - * 청소년 운영위원회 : ('13) 305개 → ('14) 320개 → ('17) 모든 공공 수련시설

2 청소년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

1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

-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('14.1월)을 계기로 학교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간 연락처 연계(본인 사전동의 필수) 제도화
- 청소년이 자신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
 -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확대
 - * 청소년상담복지센터: ('13) 196개소 → ('14) 200개소
 - 동기부여, 학습·사회관계역량 제고를 통해 학업복귀 또는 자립 준비를 돕는 학교 밖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확대
 - * 두드림·해밀 프로그램 : ('13) 50개소 → ('14) 54개소
 - 청소년인프라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 집 등)를 활용한 다양한 전일제 프로그램 확대
 - * 전일제 프로그램 : ('14) 시범사업 → ('17) 단계적 확대
 - 실질적으로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생활, 건강, 학업,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확대
 - * 청소년특별지원 : ('13) 8개 시·도 시범사업 → ('14) 17개 시·도 확대
-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, 기업과 시민의 참여 확산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 - * 직업훈련, 대안학교, 건강검진, 문화예술체험, 1:1 멘토링, 장학지원 확보 등

2 빈틈없는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

- 가출, 거리배회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·상담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확대 배치
 - * 청소년쉼터 : ('13) 103개소 → ('14) 109개소

- 자살위험, 보호관찰 등 고위기 청소년에게 청소년동반자를 연계 하여 심리적·정서적 지지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
 - * 청소년 동반자(찾아가는 전문상담가) : ('13) 985명 → ('14) 1,000명
-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위한 '레인보우 스쿨'(한국어, 기초학과, 한국생활·문화체험) 확대
 - * 레인보우 프로그램 : ('13) 20개 → ('14) 22개
- 청소년전화·문자·채팅 등 상담채널 활성화로 일상고민에서 고위기 상담까지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
 - *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(1388전화), 문자상담(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), 사이버 채팅상담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
- 개인식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
 -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아웃리치 등 청소년 위기대응에 활용

3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

- 근로청소년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현장밀착형 인력지원
 - 청소년문자상담(#1388)을 통해 발견되는 근로권익 침해,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현장도우미 연계
 - 밀착상담, 현장방문,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
 - * 청소년 근로상담 지원 : ('13) 7,173건 → ('14) 15,000건
- 청소년 근로 안전사업장을 발굴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취업정보 제공
 - * 안전사업장 발굴 : ('14)200개소 → ('16)1,000개소

3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치유 지원

1 효과적 중독치유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

-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온라인시스템 구축·운영으로 중독 청소년의 효과적 발굴
 - 초4, 중1, 고1 등 학령전환기 청소년 170만명 대상
 - * CYS-Net 연계를 통한 사후지원 강화
-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(31명)로 적기에 전문적 치유서비스 제공
 - * 센터별 상담사 1인당 담당 청소년 수: 약 6천여명 → 약 2천여명
-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·체계적 상담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상담기관·병원 등에 상담·치료 매뉴얼 보급
 - * 상담사 양성과정 운영, 지역별 순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매뉴얼 보급
- 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매뉴얼 보급으로 가정 내 효과적 지도 지원
 - * 학교 등 현장에서 부모 대상 상담·교육 실시(교육부, 미래부 협조)

2 중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
- 중독 위험군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유평화프로그램 운영
 - * 중고생(11박12일, 인터넷치유학교) : 17회 425명
 - * 초등생(2박3일, 가족치유캠프) : 10회 300가족
-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개원으로 상시 치유서비스 제공
 - 중독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(1·2주, 3주 이상 과정 운영)
 - 인터넷 게임 외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특화 운영
 - * 건립 개요 : 전북 무주 폐교 활용, 7월 준공 예정
 - * 설치 시설 : 60인 내외의 숙박·교육시설 등(부지 8,573㎡, 건물 1,265㎡)

4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

1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활성화

- 청소년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해 평가 기능 강화
 - * 청소년기본법 개정 :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근거 마련
 - * 청소년정책 평가대상 확대 : ('13) 7개 중앙부처 → ('14) 27개 중앙부처
- 지자체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모니터링·컨설팅 실시
 - * 대상 : ('13) 시·도 → ('14) 시·군·구까지 확대
- 청소년 현황과 실태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 마련
 -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 등을 위한 '청소년종합실태조사(3년 주기)
 - * 청소년 건강, 가정생활, 학교·방과후 생활, 참여·인권·사회·문화 생활 전반
 -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한 '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(2년 주기)
 - * 청소년의 매체·업소·약물이용 현황, 청소년폭력·성행동 및 가출 경험 등

2 청소년정책 연계·협력 강화

-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개편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심의·조정 강화
 - * ('13)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(협의 기능) → ('14) 청소년정책위원회(심의·조정 기능)
 - *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 제고
- 청소년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업 활성화
 - * 주기적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및 현안 중심 실무 TF 구성·운영
- 민간과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
 - 청소년활동·참여·보호(매체) 등 분야별 140여개 시설·기관·단체 지원

4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

1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

① 가족 생애주기에 맞춘 부모교육 확대

- 결혼·임신·출산 등 생애주기 맞춤형 부모교육 확대
 - 결혼준비교육, 예비부부, 아버지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실시
 - * 부모교육 참여자 확대 : ('14) 50만명 → ('17) 100만명
 - 유치원, 초등학교, 청소년센터 등 아동·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한 부모-자녀 유대강화 프로그램 확대
- 방송매체 활용, 공공기관·지자체·정부기관 등의 직장교육과정 개설 확대 등을 통해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
 - EBS와 공동기획으로 부모교육 방송프로그램 정규 편성('14.3월~)
 - 찾아가는 군장병 아버지교육 실시 및 대학교양과목 부모교육 개설 확대
 - * 중앙공무원교육원 '가족친화부모교육과정' 개설('14)

② 가족 관계 증진 및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

-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
 - 이혼 전·후 상담, 심리검사 및 치료 등 가족상담 연중 제공
 - * 상담인원 : ('14) 40만명 → ('17) 80만명
 - 수용자가족,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 간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시
 - *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참가자 : ('14) 90천명 → ('17) 120천명
- 가족단위의 동아리 활동, 행복가족 캠프,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(연중)
- 아파트단지, 군 관사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자녀양육 지원

- 민간협력(롯데그룹, 삼성생명)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실시
 - * 공동육아나눔터 : ('13) 26개 지역 → ('14) 35개 지역 → ('17) 230개 지역
 - *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: ('13) 1개소 → ('14) 4개소 → ('16) 12개소

③ 북한이탈가족 지원

- 북한이탈가족의 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생활 지원
 -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가족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
 - * 북한이탈여성 상담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: ('13) 8개소 → ('14) 10개소 확대
- 하나원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과정에 가족생활 교육 강화
 -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, 가족교육 강사 파견 지원
- 북한이탈가족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캠프, 문화활동 지원
 - *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에서 400여 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('14)

④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

- 유사사업 통·폐합, 기능조정 등을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
 -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운영기관 선정·운영('14. 3~12월)
 - * 시범지역(10개) : 서울 관악, 부산 사상, 대구 달성, 광주 남구, 대전 중구, 경기 광주, 충남 아산, 전남 광양, 경북 경산, 경남 하동
 - '14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가족센터의 모형을 정립하고 단계적 센터 통합 추진('15~'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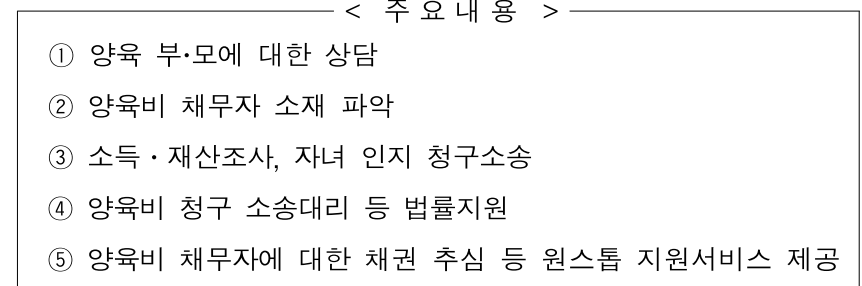
2 미혼모 청소년 등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

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

- 한부모의 양육 지원 강화
 -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적정 급여 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관련 연구 추진('14)
 - * 도시거주가구 양육비 수준 45.2~57.6만원(2012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)에 비해 현 아동양육비 지원은 최대 월 15만원에 불과
 - 한부모지원 거점기관(17개 권역)에 미혼모 대상 임신 초기 대응 원스톱 정보제공 체계 마련 및 전화상담 창구 개설('14)
-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
 - 임대주택(5년/10년) 특별공급대상(기관추천자)에 “보호대상 한부모가족(미혼모·부 포함)”을 추가하도록 추진(국토부 협조)
 -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지원
 - * 2013년 22호→2014년 66호
- 위기·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확대
 - 한부모가족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
 - * 민관협력으로 전국 20개팀 300명 자조모임 활동 지원 중('13.11월~)
 - 이혼위기가족 법원연계 무료상담 확대('13년 5개소 → '14년 7개소)

2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철저한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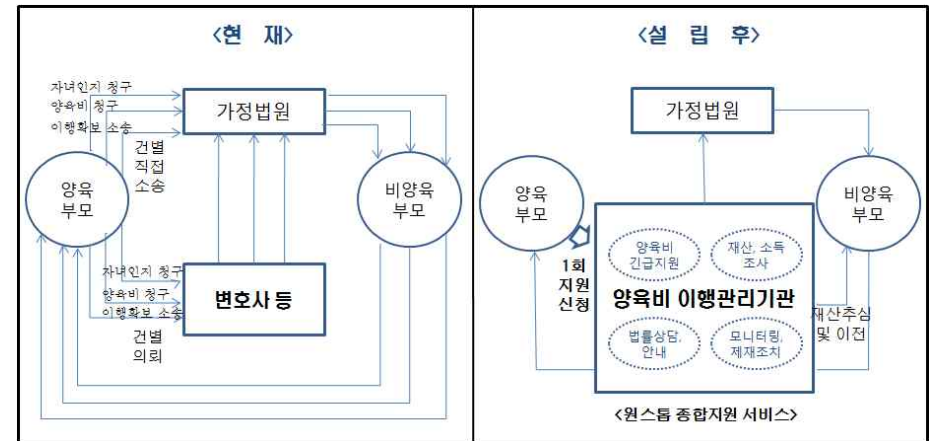
- 양육비 이행 지원관련 법률 제정 추진



※ 관련 법률 국회 계류중

- 양육비 이행관리 기관 설립 추진

-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 설치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·운영
 - * 외국 우수사례 검토 등 전담기관 설치 준비
- 개별 건별 소송을 통해 이행받던 것을 이행기관이 일괄처리
 - * 법률 제정시 공포후 1년



3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

1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조사 및 정보제공 내실화

-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
 - 국제결혼 피해유형별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도출을 위한 '국제결혼피해 실태조사(제1차)' 실시
- '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' 통합·운영 및 상담 서비스 강화
 - 다누리콜센터(1577-5432)와 이주여성긴급전화(1577-1366) 통합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
 - * 통합번호 1577-5432

2 부처간 연계·협업 강화를 통한 지원 서비스 효율화

-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중심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 설치·운영으로 관계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구축
 - * <핵심과제(주관부처)> 초기적응(여가부, 법무부), 사회참여(여가부), 인식제고(문체부), 인권보호(여가부, 법무부)
- 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」와 「외국인정책위원회」 합동 운영 추진
 - *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심의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성 도모
- 한국어교육을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고,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
 - * 한국어교육협의체(중앙·지역) 구성, 지역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균형적 지원
 - *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일정평가를 거쳐 국적취득 관련 동일 인센티브 부여
- 지역사회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지원 개편(상반기)
 - *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시·도별 거점센터 지정

3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·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강화

- 결혼이민자 정착단계와 경력 등을 고려한 종합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소득구간별 자기부담금 적용 (8월~)
- 이혼 등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·상담지원 실시(4개 지역)
 - * 여성가족부-포스코 MOU 체결('13.8월)
- 가족구성원간 소통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'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'사업 추진
 - * 부모 대상 인식개선교육 및 거점별 이중언어코치 DB 구축, 부모-자녀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

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

-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대상별로 맞춤형 이해교육 실시
 - * 일반국민(성인, 청소년), 공무원(일반공무원, 경찰, 군인), 교원(보육, 유치원) 등
 - * 전국 대상별, 권역별 다문화 이해교육 2만명 실시
- 파급력 있는 매체 활용,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홍보 캠페인 전개
 - * 홍보동영상 제작·배포, 온라인 캠페인, 라디오 특집방송 등
- 지역의 우수한 다문화프로그램 및 민관협력 모델 발굴·확산